

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차트화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泰國 Thammasat大學 경제학자인 Medhi Krongkaew 등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얀마는 현재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金融支援(financial assistance)이 없는 한 자체적인 해결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미얀마는 96년말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구한 이래 최저치의 외환보유고를 보관하고 있다). 미얀마 정

부는 이에 따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이나 ASEAN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나, ASEAN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원은 재정 및 금융관련 전문가를 同國에 파견하는 것에 국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同國의 차트貨價值 안정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亞洲經濟室 鄭在完 專門研究員】

動 向

東南亞 動向

IMF・日本이 泰國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ASEAN 지역포럼이 개최되어 安保協議體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東南亞 國家의 通貨가 금융지원 및 각국정부의 대응으로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IMF・日本, 泰國에 금융지원

국제통화기금(IMF)과 日本 수출입은행은 泰國政府의 요청에 의해 약 80억달러규모의 자금을 협조융자형식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IMF와 日本政府는 同 자금이 그동안 泰國이 바트貨 가치하락 방어를 위해 소진한 외환보

유고의 보충 및 경제회생에 사용될 예정이며, 금융지원은 8월하순에 실시될 것이라 발표했다.

IMF의 對泰國 자금지원 배경은 泰國側에 제시한 금융・재정면에 관한 개혁조건(IMF Package)을 泰國政府가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IMF가 제시한 조건은 재정긴축

에 의한 균형예산 실현, 부가가치세(현행 7%) 인상, 물가상승률 7% 이내 억제, GDP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을 7% 이내 억제,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 해결위한 전문기관설치, 투자지출 억제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泰國政府는 IMF와 협상과정에서 현재의 泰國經濟 상황에서 同 조건 중 부가가치세 인상 등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반발, 융자문제가 난항을 거듭하여 왔다.

IMF융자는 대부분 기간이 1년 정도인 대기성 융자(Standby Loan)이며 해당국의 출자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MF측은 泰國의 출자액이 8억달러이나 동남아 경제위기를 감안해 40억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日本政府도 泰國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IMF융자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40억달러를 융자하기로 했으며, 日本의 융자조건은 자재조달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언타이드 론(Untied Loan)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日本의 미쓰비씨은행, 興業은행을 비롯한 민간은행들도 수십억달러 수준의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對泰國 총융자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IMF개입후 泰國政府가 8월5일 발표한 경제재건안중 42개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악성 인플레이와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金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일시적인 금융혼란상태를 빚고 있다.

泰國政府는 금번의 경제재건책 발표를 계기로 금융불안을 저지하고 경제회생에 주력할 것이나 이에 불충분할 경우 단기적으로 泰國經濟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SEAN 지역포럼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제4차회의가 7월 27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ASEAN 외무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多者間 정치·안보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4년 창설된 ARF는 ASEAN 회원국을 비롯하여 美國, 日本, 中國, 韓國 등 20개국 및 EU 외무장관이 모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및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다. 현재 ARF 참가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러시아, 인도,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 등이다. 향후 북한도 여기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4차회의에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경제협력이나 무역자유화 같은 이슈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 가능하지만 안보나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정상회담이 없음을 지적하며, 현재 외무장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ARF를 향후 필요하다면 ARF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함을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진행되면 ARF가 정상회담급으로 격상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同 회의에 앞서 ASEAN의 미래와 관련된 큰 변화가 몇 가지 발생했다. 캄보디아 사태 및 미얀마·라오스의 ASEAN 가입이

그것이다. 또 북한의 식량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재발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져 나왔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및 이와 관련 발표된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얀마 민주화문제 -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촉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려는 ASEAN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함 ② 캄보디아 사태 - ASEAN의 조정역할을 지지하고 同國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힘쓴 ASEAN의 노력을 환영함 ③ 韓半島 문제 -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4자 회담을 적극 지지함 ④ 南中國海를 둘러싼 영유권분쟁 문제 - 국제연합의 해양조약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 ⑤ ARF의 기능강화 및 위상제고 - ARF의 기능을 이제까지의 신뢰구축기능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예방외교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분쟁해결메커니즘을 개발키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이 ASEAN에 신규 가입한 미얀마에 대해 ‘정부가 마약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라고 비난하였고, ASEAN 측도 내정간섭문제 및 최근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투기문제 등 미국에 대한 감정의 골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분위기가 험악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히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同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ARF의 기능강화에 대해, 주로 군사정보의 투명화를 위주로 한 신뢰구축기능에서 한층 발전시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외교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두가 합의, 본격적인 지역안보기구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사태에 대한 ASEAN의 중재 노력은 예방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4차 ARF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된 바 없는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ARF가 同 지역의 안보 및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중재 및 건설적 관여 정책과 그동안 준수되었던 ASEAN 내부문제에 대한 비간섭원칙의 조화문제, 중국·일본의 지역패권주의 움직임 전체의 실효성 등 향후 ARF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ARF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만만치는 않다.

東南亞 國家, IMF 및 日本 등의 지원으로 통화가치 안정 기미

泰國 정부가 IMF의 차관제공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함에따라, IMF, ADB, 세계은행, 日本輸出入銀行으로부터 총 200억달러 규모(사쿠라은행 등 민간은행의 50억달러 융자 포함)의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는 융자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에서 균형예산 실현, 부가가치세의 7%에서 10%로 인상, 인플레이의 7%이내 억제, 경상수지적자의 GDP 對比 7%이내 억제, 불량채권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등을 요구하여왔다. 이에 泰國는 8월 5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태국중앙은행이 자국내 금융기관에 5,000억 바트를 지원융자키로 하고, 추가로 42개 부실 금융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며,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하는 등 IMF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

〈표 1〉 동남아 주요국의 對 美달러 환율변화 추이

	1995	1996	1997.6-7월 중			1997.8.1	1997.8.4	1997.8.5	1997.8.6
태 국	24.89	25.32	29.95(7.11)	30.25(7.14)	30.05(7.17)	32.15	31.65	31.35	30.95
인도네시아	2,308	2,383	2,455(7.14)	2,510(7.18)	2,635(7.21)	2,617	2,605	2,605	2,585
말레이시아	2.51	2.52	2.5675(7.14)	2.6350(7.18)	2.6330(7.21)	2.6385	2.6355	2.6410	2.6395
필 리 핀	25.71	26.20	26.41(7.10)	30.50(7.14)	30.00(7.15)	29.10	29.50	28.60	28.58

주 : 괄호안은 날짜.

자료 : 1995, 1996년 자료는 각국 정부 통계청 자료, 1일 환율은 A.W.S.J. 이용 작성.

이에따라 泰國 바트貨의 폭락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동남아 각국의 통화가 泰國에 대한 日本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발표와 각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4일 IMF 및 日本 등의 泰國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소식이 전해지고 이어서 지원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泰國 바트貨가 8월 1일 달러당 32.15에서 8월 6일 30.95로 상승하는 등 4일 이후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동남아 각국들은 통화의 가치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8월 3일 링기트貨에 대한 환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의 링기트貨 매도 스왑 거래한도를 외국인 1인당 2백만달러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7월 환투기꾼들의 각국 통화투매에 대응, 각각 10억달러 정도를 투입하는 등 자국 통화방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환율 1일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환율정책에 유연성을 주고 있다.

日本輸出入銀行과 민간은행들이 동남아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협조용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일본업체들이 泰國,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계 은행의 용자도 매우 많아 이 지역의 경기불안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泰國, 필리핀의 총 외채(장기부채기준) 중 엔화 부채는 1995년말 현재 31%~48%를 기록하였다(표 2 참조).

상기 4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말 현재 20.4%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고로 日本의 해외투자에서 상기 4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9.5%, 1995년 8.1%에 달했다.

국제금융기관 및 日本의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이 지역의 급격한 통화 가치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泰國,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아직까지 통화가 고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평가절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泰國과 필리핀의 경우 그 동안의 통화가치폭락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당분간 경제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泰國의 경우 정부의 바트貨 폭락 수습책 발표이후, 군부 쿠데타說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불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표 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총외채 및 그 중 엔차관의 비율(1995년)

(단위 : %, 억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총외채	1,078.3	343.5	567.9	394.5
엔차관 비율	35.4	31.7	48.1	36.9

주 : 엔차관 비율은 장기부채만을 기준으로 한것임.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7.

【亞洲經濟室 權耿德 / 申東和 / 金完仲 研究員】

動 向

西南亞 動向

印度政府는 自國 소비재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美國, EU 등에 의해 WTO에 제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香港의 PERC社는 印度를
아시아에서 경제개방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하였다.

印度, 消費財輸入 開放과 관련하여
WTO에 提訴당할듯

인도는 7월 1일 자국의 소비재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가진 무역회담에서 상호간 합
의점 모색에 실패, 이들 국가들에 의해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에 제소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년동안 EU, 미국, 일본 등은 인도
에 대해 소비재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줄기
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자
국 소비재시장을 완전개방할 경우 값싼 외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경제가 파국을 맞